

국책은행,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 산은, 수년째 2%대 정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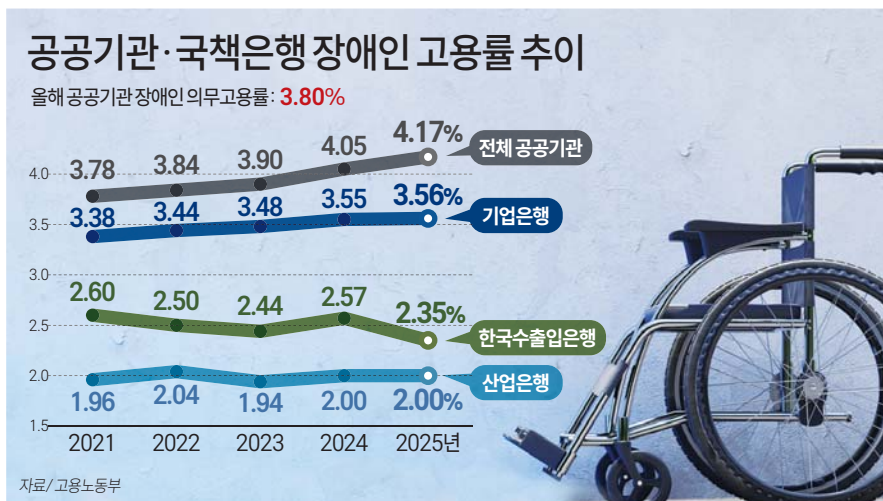
5년째 의무고용률 3.8% 밑돌아
산은·수은, 수년째 2% 안팎 정체
기업은행, 작년 3.56% 기준 이하

전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이 법정 의무고용률을 넘어 4%대에 진입했지만 KDB산업은행·IBK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 3곳은 최근 5년간 단 한 차례도 의무고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부담금을 납부하는 사업체가 적지 않다는 점을 문제로 보고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하면서 국책은행의 장애인 고용 책임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질 전망이다.

30일 고용노동부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4.17%로 집계됐다. 공공부문 법정 의무고용률인 3.8%를 0.37%포인트(p) 웃도는 수준이다.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률은 2021년 3.78%에서 2022년 3.84%, 2023년 3.90%,



2024년 4.05%, 지난해 4.17%로 꾸준히 상승했다. 2022년 이후에는 매년 법정의 의무고용률을 넘어섰다.

반면 국책은행 3곳은 같은 기간 모두 법정 기준에 미달했다.

지난해 산업은행의 장애인 고용률은 2.00%로 공공기관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법정 의무고용 인원은 125명이었지만 실제 고용 인원은 66명에 그쳐 기준 인원의 약 52%를 채우는 데 그쳤다.

산업은행의 장애인 고용률은 2022년 2.

04%에서 2023년 1.94%로 떨어진 뒤 2024년과 지난해 2.00%에 머물렀다. 수년째 2% 안팎에서 정체된 셈이다.

한국수출입은행 역시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이 2.35%로 전년 2.57%보다 오히려 낮아졌다.

기업은행은 3곳 가운데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은 3.56%로 2021년 3.38% 이후 매년 개선되고 있지만 법정 기준인 3.8%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했다.

장애인 고용의무제는 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공공·민간 사업주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공공부문 3.8%, 민간부문 3.1%다.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하면 미달 인원과 고용 수준에 따라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고용률이 낮을수록 1인당 부담금 단가가 높아지는 구조다.

문제는 상당수 사업체가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기보다 부담금을 납부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고용의무 대상 사업체 3만3452곳 가운데 의무고용 이행률은 43.3%에 그쳤다.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부담금이 발생한 사업체만 8361곳, 부담금 규모는 총 8898억원에 달했다.

10년 이상 연속으로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아 명단공표 대상에 오른 사업체도 51곳에 달했다.

정부 역시 현행 부담금 제도가 장애인

고용을 충분히 유도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 형평성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9월 노사와 장애인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고용부담금 제도 개선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권에서는 공공기관 전체의 장애인 고용 수준이 개선되고 있는 만큼 국책은행 역시 부담금 납부에 의존하기보다 장애인이 실제 근무할 수 있는 직무를 발굴하고 별도 채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책은행은 수익성만을 추구하는 민간 금융회사와 달리 정책 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함께 수행해야 한다”며 “매년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의무를 대신하기보다는 장애인이 수행할 수 있는 직무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채용으로 연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

유리 기자

yu115@metroseoul.co.kr



metro

반도체 수출 호조, 물가상승 압력 키운다

한은, 수요주도 물가와 근원물가
상반기 고유가 물가상승 이끈 반면
하반기 수요측 물가압력 확대 예상
근원물가 5%대 중후반 이어갈 듯

반도체 수출 호조가 내수로 번지면서 향후 물가를 밀어 올리는 힘이 공급 충격에서 수요 회복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근원물가 상승률이 2%대 중반을 넘어설 경우 여행·숙박·외식 등 개인 서비스를 중심으로 가격 인상이 다른 품목까지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는 경고다.

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수요주도 물가압력이 근원물가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상반기 물가 상승을 이끈 고유가 등 공급측 압력이 점차 완화되는 반면 반도체 수출 호조와 교역조건 개선으로 가계·기업의 실질구매력이 커지면서 수요측 물가압력이 확대될 수 있다. 향후 근원물가가 2%대 중후반의 높은 흐름세를 상당 기간 이어갈 가능성도 제기됐다.

◆ **근원물가 2.5% 넘으면 가격 동조성**
한은 연구진은 2000년 이후 수요압력이

높고 근원물가 상승률이 2.5%를 지속적으로 웃돈 시기를 네 차례로 구분했다. 카드사태 이전인 2002년과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2분기~2008년 3분기, 금융위기 회복기인 2011년 2~4분기, 팬데믹 충격 회복기인 2022년 1분기~2024년 1분기다.

이들 시기에는 임금이나 자산가격 상승으로 가계의 소비 여력이 먼저 개선된 뒤 실제 소비와 물가가 시차를 두고 상승하는 공통점이 나타났다. 수요가 회복되자 기업들이 그동안 가격에 반영하지 못했던 원가 상승분을 전가하고, 가격 인상이 일부 품목에서 다른 품목으로 확산됐다.

특히 근원물가 상승률이 2.5% 안팎을 넘으면 개별 품목 가격이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동조성’이 급격히 강해졌다. 통계적으로 추정된 임계구간도 2.5~2.8%로 나타났다. 개인서비스 품목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더 뚜렷했다.

과거에는 집세와 교육서비스 등 정책·제도적 영향을 받는 품목이 근원물가 상승을 주도했다. 반면 팬데믹 이후에는 초기 내구재 가격 상승에 이어 여행·숙박·음

식 등 경기와 수요에 민감한 개인서비스로 상승세가 확산됐다. 최근에도 개인서비스가 근원물가 흐름세를 이끌고 있어 가격 상승의 확산 범위와 지속성이 함께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 **GDP갭 1%p 확대에 근원물가 최대 0.4%p ↑**

계량분석에서도 수요가 이미 강한 국면일수록 추가 수요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실제 국내총생산(GDP)이 잠재 수준을 얼마나 웃도는지를 보여주는 GDP갭률이 고수위 국면에서 1%포인트(p) 확대되면 경기민감물가 상승률은 0.42%p 높아졌다. 전체 기간을 대상으로 추정한 0.11%p의 약 네 배다.

경기민감품목이 전체 근원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직접 추정치를 종합하면 GDP갭률이 1%p 확대될 때 근원물가 상승률은 약 0.1~0.4%p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수출가격 상승으로 교역조건이 좋아져 실질 국내총소득(GDI)이 늘어나는 점도 추가적인 물가 상승 요인으로 지목됐다.

/김주형 기자 gh471@

“탄천물재생센터 이전지 확보 핵심과제”

》1면 ‘직주근접 유리…’서 계속

김 장관은 지난 27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탄천물재생센터는 옮기는 결정보다 이전 부지와 장소를 선정하는 게 더 어렵다”며 이전지 확보를 핵심 과제로 꼽았다. 서울시는 시설 이전에 4~5년, 이후 주택 건설에 다시 4~5년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어 단기간에 공급 효과를 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전 부지를 찾지 못할 경우 기존 처리 시설을 지하화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서울시는 현재 탄천물재생센터의 처리

시설을 이전·지하화하는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6년 서울시 업무보고’에 따르면 하루 80만톤 규모의 시설을 2034년까지 이전·지하화하는 계획을 내놨다. 다만 지하화로 악취·경관 문제를 줄이더라도 대규모 하수처리시설을 받아야 하는 이전 지역 주민의 반발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 **기대와 회의 엇갈린 주민 반응**

탄천물재생센터 현장에서는 센터 이전을 반기면서도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주택 유형을 두고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대청역 인근의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하수처리장이 옮겨가고 청년들이 들

어오면 고령층이 많은 동네가 활기를 찾을 것”이라면서도 “임대주택만 들어온다면 주민들이 선호하진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B중개업소 관계자는 “날이 안 좋을 때 약취도 심한 곳인데, 혐오시설을 받아줄 지역을 찾는 것부터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탄천물재생센터를 이전하기보다 용산공원 일부를 활용하는 편이 현실적이라는 주민 의견도 나왔다.

일원동의 한 주민은 “이용률이 그리 높지 않은데 넓은 부지 전체를 공원으로 두는 것은 아깝다”며 “청년들에게 집이 있어야 결혼하고 아이도 낳을 텐데, 집이 없으면 공원에서 뛰아날 아이들도 사라질 것 아니냐”고 말했다. /성채리 수습기자 cr56@

9월 첫 주, 전국 3개 단지서 3713가구 분양

분양 캘린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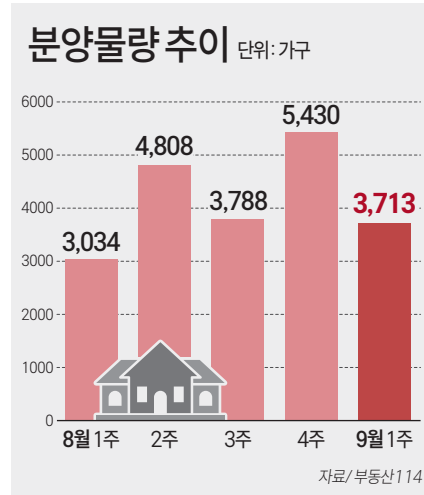
시티오씨엘9단지오션파크뷰
지상 최고 49층 9개동 1949가구

9월 첫째 주에는 전국 3개 단지 총 3713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이 가운데 일반 분양은 2387가구다.

30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시티오씨엘9단지오션파크뷰’, 인천 서해구 검암동 ‘검암역푸르지오프라베뉴(공공분양)’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IPARK현대산업개발·현대건설·포스코이앤씨는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일원에서 ‘시티오씨엘9단지오션파크뷰’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최고 49층, 9개동, 전용면적 59~136㎡, 총 194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제2경인고속도로 진입이 수월해 수도권 인근도시로 이동이 편리하다. 2028년 수인분당선 학익역이 개통 예정으로 대중교통 편의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단지 바로 앞 대규모 공원(그랜드파크)이 조성될 계획이며 일부 세대는 서해바다 조망이 가능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췄다. 도보권 내 용현하이츠(2028년 9월)와 학익동(2029년 3월) 등이 개교 예정이다.

모텔하우스는 광주 북구 임동 ‘챔피언스시티1차’, 울산 남구 야음동 ‘그랑라크



에일린의뜰’, 충남 천안시 성정동 ‘두정역푸르지오그랑피크’ 등 4곳이 오픈 예정이다.

아이에스동서는 울산 남구 야음동 일원 남구B-14구역을 재개발한 ‘그랑라크에일린의뜰’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최고 30층, 13개동, 총 1,521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전용면적 59~102㎡, 1153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수암로, 산업로, 남부순환로 등을 통해 울산 시내 이동이 용이하다. 롯데마트, 현대백화점, 뉴코아 아울렛 등 대형쇼핑몰과 남구청, 울산고속시외버스터미널 등이 차량으로 10분 거리에 위치해 생활인프라 접근성이 양호하다. /한상미 기자 smahn1@

신한금융, 주주환원·보상체계 등 논의

기관투자자 ‘이사회 라운드테이블’

신한금융지주 이사회는 지난 27일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을 초청해 ‘이사회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사회라운드테이블은 국내외 주요 투자자들과 그룹의 중장기 전략과 지배구조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신뢰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매년 정례적으로 마련되는

자리다.

이번 행사에는 약 50개 국내외 기관투자자가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했다. 신한지주 과수근 이사회 의장을 비롯한 독립이사 6명과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등 주요 경영진도 참석했다.

기관투자자들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중장기 방향성과 주주환원 계획, 이사회 및 경영진 평가·보상체계 등을 중심으로 질의와 토론을 이어갔다. /나유리 기자